

Vol. 5

2023.05.16.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원태희전임 thwon@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신설	관세청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연구목적 관세무역 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04.0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와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의 신설	관세법 제277조의 3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6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보보호시스템과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사용 목적·기간 및 이용자 등이 포함된 사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04.01.

I. 법령 개정사항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진신고 배제 사유 삭제	종전에는 관세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관장이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불가능 하였으나, 해당 사유를 삭제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04.01.

I. 법령 개정사항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함.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 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됨을 명확히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의 수입확인서로 규정함.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p>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 사항을 반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수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6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 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함.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타법령’ 용어를 ‘다른 법령’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

(3) 시행일

’23.04.07.

I. 법령 개정사항

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물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및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물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정물질의 정의 확대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추가함.
규정의 명확화	특정물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특정물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3) 시행일

’23.04.19.

I. 법령 개정사항

6.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 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 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 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함.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 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시행일

’23.04.19.

I. 법령 개정사항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이미 납부한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담금의 반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납부한 부담금 반환절차 간소화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발광다이오드 조명에 대한 재활용 방법 개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함. ① 합성수지 및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②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시행일

’23.04.19.

I. 법령 개정사항

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변경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연월 표시 등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방법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무선기자재 적합성 평가 변경절차 개정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조시기 표시방식 다양화	적합성평가 제조시기 표시방식에 대해 제조 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04.18.

I. 법령 개정사항

9.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으로 화학식 $\text{Al}(\text{OH})_3$ 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mu\text{m}$ 이상인 것으로 함(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3) 시행일

’23.04.28.

I. 법령 개정사항

10.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프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과대상 물품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 으로 함(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덤프방지관세율	공급자별 2.20%~36.98%로 하고, 상세 덤프방지관세율은 별표 2에 규정함.
적용기간	공포한 날('23.05.08)부터 5년간 부과할 예정임.

(3) 시행일

'23.05.08.

I. 법령 개정사항

1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장애인용품 감면 건,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 수입물품임에도 B/L을 분할하여 소액면세나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통관하려는 경우는 B/L 분할 신고를 제한하는 한편, 가산세 세목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수입신고 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p>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인 등의 수입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p> <p>① 장애인용품 감면 :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p> <p>②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제도를 활용하여 부분품을 분할 수입신고한 경우</p>
수입요건 회피 등 방지 목적 B/L분할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을 악용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물품을 B/L 분할 신고하여 수입요건 확인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함. 하나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 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면세범위 내로 분할 신고하여 소액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사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함.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가산세 부과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세분화하여 밝히도록 납부고지서 서식을 변경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시행일

`23.05.03.

I. 법령 개정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한 대상 협정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	아래 구분에 따른 적용대상별 대체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원산지 증빙절차를 간소화함. ①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②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적용 대상 협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틸렌, 접착제 등 FTA 활용 실익이 높은 24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함.(293개 품목 → 317개 품목) •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발효 협정에 대해서도 간이확인 활용 가능한 품목을 지정함.

(3) 시행일

’23.05.01.

I. 법령 개정사항

1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	<p>아래 구분에 따른 적용대상별 대체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함</p> <p>①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p> <p>②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p> <p>③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 :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p> <p>④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p>

(3) 시행일

23.05.01.

II.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유통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변경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제조일자, 제품명이 같은 제품에 한해 부적합 처분토록 범위 명확히 하고자 함. 수입주류의 경우에 대해 제품명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통이력 추적관리 등록취소 처분 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취소'를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 명확히 하고자 함. 품목별 이력추적등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품에 한해 등록 취소를 하는 등록 취소 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함.
행정처분 위반근거 법령 정비	'시정명령'과 '시설개선 명령' 규정 조항을 분리하여 행정처분 근거법령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수렴기간

’23.05.17.

II. 입안 예고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수입위생용품을 반송, 폐기 외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제조회사·재질·색상이 동일하고 유형만 다른 일회용 손가락·포크 등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처리기한 규제완화	최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보고하는 경우에는 생산 시작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변경 보고도 최초 보고시와 동일하게 제품 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의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1월 31일까지에서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부적합 수입위생 용품의 용도전환 근거 마련	위생용품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등 위반으로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했으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창고 등의 시설기준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영업소에 설치한 창고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창고 등의 시설 확충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동일사·동일 수입위생용품 요건 완화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 제조국·국외제조회사·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서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에는 유형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일회용 컵·숟가락 등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 기준 완화	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은 자가품질검사를 제품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은 재질이 동일한 경우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3) 의견수렴기간

`23.06.05.

II. 입안 예고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전 협의·권고 절차 마련	외환당국이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협의 및 권고)를 명시하고자 함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외환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하고자 함.
과태료 부과금액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원 → 20억원,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원 → 50억원)을 대폭 상향하고자 함.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규로 규정하고자 함.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4] 가목 유독물질 28종(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의 분류표시를 추가·변경하고자 함. [별표 4] 마목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6”란 및 “75”란)의 분류표시를 추가·변경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5.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하고자 함.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신규 지정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련 조치 법제화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함.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 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을 방지하고자 함.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 ‘명기’ → ‘작성’

(3) 의견수렴기간

’23.05.18.

Ⅲ. 조세심판사례

1.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000 를 구성하는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7307.29-0000 호(이하 “제 7307 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2014.1.9.부터 2016.7.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000 외 000 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 13 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 7307 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 만원당 100~180 원)을 적용하여 관세 000 원(이하 “쟁점정액환급액”이라 한다)의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9. 000 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000 원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 HSK 제 8307.10- 0000 호(이하 “제 8307 호”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8. 처분청에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쟁점정액환급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쟁점물품에 제 8307 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 만원당 40~80 원)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한 후 과다환급 관세 000 원을 자진신고(이하 “쟁점자진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진신고 건 중 환급신청번호 000 호 외 000 건(과다환급 관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1 만원 미만인 000 건이 제외되었다)에 대한 과다환급 관세 000 원 및 가산금 000 원 합계 000 원(이하 “쟁점자진신고. 납부액”이라 한다)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4.26. 처분청에 쟁점자진신고. 납부액 중 관세 000 원 및 가산금 000 원 합계 000 원(쟁점자진신고. 납부액의 세목 및 합계금액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4. 이를 반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결정일

2023.03.09. (조심 2022 관 0099)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 제 9702.00-1000 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 4911.91-9000 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21.5.3. 000 소재 AAA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BBB 가 제작한 판화 000 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9702.00-1000 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5.3. 위 가.의 수입신고 사항을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이 분류되는 HSK 제 4911.91-9000 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5.3.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신청을 통해 처분청이 안내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000 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인쇄화가 분류되는 HSK 제 9702.00-2000 호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1.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 9702.00-2000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3.13.(조심 2022 관 0096)

Ⅲ. 조세심판원 사례

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000 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000 소재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 건으로 전기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000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000 FTA”라고 한다)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한-000 FTA 원산지 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 건(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한 후, 2021.4.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 17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 조에 따라 쟁점물품①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1.6.29. 쟁점물품①이 한-000 FTA 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000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2021.12.24. 000 관세당국으로부터 “상업송장에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000 어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회신받았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2.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000 관세당국의 국제검증 원산지확인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①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 건(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에 대하여 자율점검안내를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2.2.23.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000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보정이자 000 원 포함) 합계 000 원을 수정신고(보정신청)·납부하였다.

Ⅲ. 조세심판원 사례

마. 청구법인은 2022.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귀책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이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3.13.(조심 2022 관 0104)

Ⅲ. 조세심판사례

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000 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000 소재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 건으로 전기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000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000 FTA”라고 한다)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한-000 FTA 원산지 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 건(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한 후, 2021.4.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 17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 조에 따라 쟁점물품①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1.6.29. 쟁점물품①이 한-000 FTA 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000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2021.12.24. 000 관세당국으로부터 “상업송장에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000 어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회신받았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2.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000 관세당국의 국제검증 원산지확인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①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 건(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에 대하여 자율점검안내를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2.2.23.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000 FTA 협정관세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보정이자 000 원 포함) 합계 000 원을 수정신고(보정신청)·납부하였다.

Ⅲ. 조세심판사례

마. 청구법인은 2022.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귀책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 에서 쟁점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3) 결정일

2023.03.15. (조심 2022 관 0107)

Ⅲ. 조세심판사례

5. 관세법 제 97 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11.13. 000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모델규격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 97 조에 따라 2021.3.31.까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2021.3.26. 및 2021.12.23.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2.3.30.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다시 2022.3.29. 같은 사유로 2022.11.18.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4. 「관세법」 제 97 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범위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2022.4.22.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임박을 안내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3.27. (조심 2022 관 01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ZINC PROTEINATE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Feed additives; ZINC PROTEINATE; U.S.A
	② Feed additives ; SELISSEO 2% Se ; GERMANY
	③ Feed additive; LIPTO-TRAN
	④ Feed additives; Keyshure Copper; U.S.A
	⑤ Feed additives; Keyshure Zinc; U.S.A
	⑥ Feed additives;Keyshure Cobalt; U.S.A
	⑦ Feed additives;Keyshure Manganese; U.S.A
	⑧ Feed Additive (CDL)
물품 설명	미량광물질인 크롬(Cr)과 아미노산(메티오닌)의 반응생성물인 크롬-메티오닌 복합물과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사료성분등록증 :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
HS CODE	- 변경 전 : 제 2309.90-3030 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 제 2309.90-9090 호 (기본세율 5%)
변경 사유	- “사료첨가제” 중 일부 품목이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보조사료/단미사료)된다는 소관부처(농림부)의 의견으로, 제 2309.90-30 호(사료첨가제)와 제 2309.90-90 호(기타)가 중복 적용됨에 따라, - 부처(기재부-농림부-관세청)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 결정 이후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 규칙에 따른 용어를 HSK와 일치”토록 합의한 바, -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건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료이므로 “사료첨가제”가 아닌 “기타 사료”에 분류 (제 2023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4.20.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AveMix MC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Feed preparations; 아베믹스엠씨티 (AveMix MCT) ; BELGIUM
물품 설명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MCT) 오일과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
HS CODE	- 변경 전 : 제 2309.90-9000 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 제 2309.90-2099 호 (기본세율 5%)
변경 사유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보조사료의 정의에 부합하며, 소관부처(농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 2309.90-20 호에 분류 (제 2023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4.20.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atellit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Satellite; U.S.A.
	② Articles of silicon carbide; Out Cover; KK4572; U.S.A
	③ Articles of silicon carbide; Inner Cover; KK-4573; U.S.A
물품 설명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제작된 탄화규소(SiC) 재료의 링(Ring)으로, 반도체용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장비(MOCVD) 내에서 가공될 웨이퍼를 올려놓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됨
HS CODE	- 변경 전 : 제 6815.99-0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86.90-2040 호 (기본세율 0%)
변경 사유	광물성 재료를 성형하거나 조형하여 만든 제품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메틸트리클로로실란, 수소가스 등)을 화학기상증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16 부 주 제 2 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 8486.90-2040 호로 분류 (제 2023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4.20.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Manual Motor Starter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Manual Motor Starters, MS-32H
물품 설명	모터 배전반에 설치하여 단락 등 이상 전류나 과부하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회로가 차단되고 복구 후에는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On/Off)하는 방식의 차단기
HS CODE	- 변경 전 : 제 8537.10-2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536.20-0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수동식 개폐 장치는 자동차단기의 구조상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므로 그 자체를 '자동차단기'로 보아 제 8536.20-0000 호로 분류 (제 2023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4.20.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인천세관,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

인천세관은 3월 23일 물류시스템 9개사와 수입화물 선하증권의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작년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4월 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수입화물 선하증권을 물류시스템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국내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는 방식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 발행 수입선하증권이 통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해 물류시스템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관세청·기표원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수입 학용품 24 만개 적발

새학기를 맞아 학용품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 약 24 만개가 적발돼 통관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3 월 22 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수입 학용품과 완구,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 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2 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제품 24 만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 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 만 4,000 개,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약 1,000 개가 그 뒤를 이었다.

부적합으로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인증 미획득(약 16 만 4,000 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 만 4,000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 만 4,000 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000 개)제품 순으로 적발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관세환급 신청 가능

앞으로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 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3월 2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 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 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다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 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 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이북(e-book)], ▲채팅로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환급 신청 서비스' 이용 절차는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간편 본인 인증,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 진행상황 조회 및 환급완료를 거치게 되며, 환급지급금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통보받게 된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자유무역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활용 사각지대 사라져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4월 3일(월)부터 시행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해야 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동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게 된다.

사 례

물류업체 에이(A)사는 외국법인 비(B)사의 의뢰를 받아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부산 신항의 자유무역지역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외국법인 비(B)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약 20억원 상당의 긴급한 자동차 부품 공급 요청을 받아, 이를 에이(A)사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했다. 에이(A)사는 관세청의 제도개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인도네시아로 반출(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 월 2 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관세청,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개편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했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①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대중(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22) : 반도체 93%, 디스플레이 88%, 바이오 91% 등

** 예)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추진(중기부, '23~'31, 2,726억원), 세계최대 바이오 생산기지화(化) 추진 등

*** ('15~'22, 대중(對中) 해상 특송수출액 2,964 배 증가) ('15) 7만\$ → ('22) 2.1억\$

(('15~'22, 대중(對中) 전체 특송수출액 2.2 배 증가) ('15) 1.4억\$ → ('22) 3.1억\$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마약류 적발비중('22)> 국제우편물(60%), 항공특송화물(25%), 여행자휴대품(15%)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22, 건수기준)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17~'22)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설명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6. 적극행정으로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한다

관세청은 3.27(월) 의결된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하여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한다.

< 과제 1.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 완화 >

첫째,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관세법 제 135 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21 조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 시간 전까지, ▲중국,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 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이 2년간 4,700 여 건에 달하는 등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 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6 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등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과제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 효율화' >

둘째,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갱신 절차를 개선한다.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5 년간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갱신 신청 시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5 년간 유효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증수출자는 각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5 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여러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3 개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당 품목(보습제)만 갱신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나머지 품목도 함께 갱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만료일 예시>			
품목	유효기간 만료일	인증유효기간 갱신 후 만료일	
		[현재] 개별연장	[개선] 통합연장
보습 제	2023-04-11	2028-04-10	2028-04-10 (가장 빠른 만료일로 통합)-
유화제	2025-03-03	2030-03-02	
향료	2025-10-26	2030-10-25	

올해 10 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에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3 조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7.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 조 원 이상 절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 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총 59개국(전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의 체결·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불(6.6조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번에 도출된 관세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성과인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서 노 실장은 “앞으로는 FTA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8. 중소·중견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상담(컨설팅) 지원

산업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품목별 가격·생산·수출 정보 및 각국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은 4월 3일,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4월 17일부터 각각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지원 희망 기업들은 이번 시범사업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9.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에 산업부가 전면에 나선다.

산업부는 국내 시험기관이 해외인증을 대행하여 수출기업의 인증 관련 비용, 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은 4 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표준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 개 해외인증 지원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인증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출업계는 우리 상품 수출 고도화와 연결되는 해외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시험인증 취득, 판로 개척 등 해외인증 취득 전반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 연도별 수출바우처 사업(해외인증 부문) 신청 현황 >

연도	참여기업(개)	해외인증 신청수(건)
2018	446	1,130
2019	667	1,848
2020	914	3,480
2021	693	3,042
2022	462	3,130

* '21 ~'22 년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수 감소

** 코트라 수출애로 119 접수 797 건 중(中) 규격·인증이 234 건(29.3%) 차지 ('22.9~11)

이에 산업부(국표원)는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해외인증 취득 전(全)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개요>

- 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을 통한 해외인증 정보 통합제공 및 상담
- ② 기업 수준별 전담 매치업(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심층·전문 교육·컨설팅
- ③ 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정부간 협력 지원 등
- ④ 관련 부처·지원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한 비용지원 등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UL(美), CE(유럽) 등 해외인증은 우리 기업이 수출 시 해당국 규제 또는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수불가결하게 획득하게 되어, 인증 비용·시간 등에 부담이 큰 상황이나,

*'22 년 수출바우처사업(산업부·중기부) 지원 현황 중 미국·캐나다(43%), 유럽(32%) 권역의 해외인증이 전체의 75% 차지

지금까지 해외인증 관련 정책은 정보제공, 획득 비용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 위주인데다, 각 사업간 연계, 관련 정보 통합 관리 등의 총괄·조정 기능 미비로 지원효과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산업부·국표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기부) 등

이번 「해외인증 지원단」과 함께 시범 운영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에서 해외인증 정보 통합제공 및 글로벌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출시를 위한 전문가 1:1 매칭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 (<http://export.k-onestop.kr>, 02-6240-4770)

또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인증비용·시간이 크게 단축*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 국내 A 시험기관이 전기차충전기 분야 미(美)에너지스타 인증의 국내 시험기관 등록 추진 ('23.上)시, 시험시료 송부(물류)비용 약 14 천달러 (건당, 약 18 백만원) 절감

해외 인증 관련 기업 애로의 신속 해소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애로 접수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별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 차관은 “신설된「해외인증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지원기관들이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에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3 대(大) 애로(무역금융·인증·마케팅) 해소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0.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 군 임시마약류로 4월 4일 지정했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 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 확인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2.23. 기준)>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 군과 2 군으로 분류
	- (1 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9종)
	- (2 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 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1. 치과용 조제품 등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29 건 추가

관세청은 「관세법 제 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했으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치과위생용 제품류, 치과용 조제품 등이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에 추가됐다.

또 통관 여건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을 조정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 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4월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을 조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HSK 2022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 사항 반영을 위해 세관장확인 수출입물품(별표 1·2)을 개정했다.

수출의 경우 5 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353 개의 품목이 변경됐고, 18 개 품목은 제외됐다.

수입은 치과용 조제품, 윤활제, 인쇄용 잉크·토너 등 29 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442 개 품목이 변경됐고, 65 개 품목이 제외됐다.

이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현행화했다. 이에 「약사법」 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해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를 명확화했으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의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개정해 구비요건을 현행화했다.

아울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을 위해 동법 제 8 조를 개정하고 별지 제 2 호 서식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정기 수요조사실시를 명문화(매년 11 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이와 함께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했으며,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해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 신청 대상물품과 업무도 추가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2. 한일 수출관리 현안 집중 논의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 10 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4.10(월), 4.12(수)~13(목)과 4.18(화)~20(목)에 개최했다.

* (韓)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日)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

4.10(월)과 4.12(수)~13(목)에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

4.18(화)~4.20(목)에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3. 국민건강·안전 위협 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4월 18일(화)부터 7월 26일(수)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 * 1)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하였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최근 3년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적발실적(관세청)>

[단위: 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부정수입 ⁽¹⁾	79	563	76	1,080	98	2,585
	보건사범 ⁽²⁾	73	694	45	325	52	214
합 계		152	1,257	121	1,405	150	2,799
1건 당 사건금액		-	8.3	-	11.6	-	18.7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대 중점단속 대상 품목>

구 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류, 식품류(포장재포함) 등
유아·어린이용품	유모차(보행기, 아기띠 포함), 분유, 어린이 화장품, 완구류(놀이기구, 게임기 등), 문구류 등
캠핑용품	캠핑카(용품), 텐트(용품), 야외 가전용품(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	수상레저용품(수영복, 구명조끼, 튜브 등), 선글라스, 전동킥보드, 레저용 자전거·오토바이(용품), 낚시·등산용품, 스포츠 용품 등
기타 선물용품 등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 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5 대 중점단속 불법유형>

구 분	중점단속 불법유형
밀수입	정상물품 흔적, 판매용 물품의 자가소비 가장, 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품명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또는 밀수품 취득
부정수입 (수입요건 회피)	요건을 갖춘 모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인증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요건·인증 없이 수입하는 행위
보건사범	식·의약품·화장품류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여부 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
원산지위반 (국산둔갑)	저가 수입물품을 국내생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여 국내 기업의 존립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
지재권침해 (위조상품)	국내외 상표를 도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불법수입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고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4.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산업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 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 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 1 종 특정물질로 HFCs 를 제 2 종 특정물질로 구분 ②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 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③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 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 2 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 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 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 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5.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부는 4.24.(월) ①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②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①일본을 “가의 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월)부터, ②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 개⇒798 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금)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 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 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①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 일→5 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 종→3 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기존 : (가의 1 지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 개국 / [가의 2 지역] 일본개정 : (가 지역으로 통합)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9 개국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구분	종류	개정 前	개정 後
심사기간	개별수출허가	15 일	5 일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 종	허가신청서 등 3 종
	포괄수출허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 종	허가신청서 1 종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②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 개에서 798 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 일 0 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 19 조 3 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 개 추가>

개정 전 57 개	개정 후 798 개
(현재) 전자, 조선 등 57 개	(좌동) 전자, 조선 등 57 개 (신규)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 만불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 개

고시 시행 전인 4.27.(목)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했으나,

고시가 시행되는 4.28.(금)부터는 ①既계약분 수출(4.27 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했으며,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상담 데스크 : ☎ 02-6000-6496~9

** 통제품목-HSK 연계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재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6.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 2 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월)부터 시행했다.

<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5월~ >

정부가 지난 3.29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면세범위(미화 800 달러) 초과 물품, 미화 10,000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신고대상 물품 >	
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달러 이하 물품, 술 2 병(2 리터 이하 & 미화 400 달러 이하), 담배 10 갑, 향수 60밀리리터
②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 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
③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④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⑤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23.7월~ >

금년 7 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행	개선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세금계산 → 종이 고지서 수령 → 납부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 모바일 고지서 발급 → 모바일 납부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 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7.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로 수출 공급망을 더 강하게

산업부는 4.27.(목) 영국 수출 기업,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對)영 주요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영국 시장 선점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무역 공급망은 탈 EU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대(對)EU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 인도 등 비(非)EU 권에서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영국이 수출입하는 주요 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대(對)EU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등 공급망 대체가 진행 중이다.

* `18~`21 영국의 대(對)EU 수입은 연평균 3.1% 감소, 비(非)EU 수입은 동기간 4.6%씩 증가 (무역협회, `22)

** `18~`21 영국의 품목별 대(對)EU 연평균 수출입 감소율(수출, 수입) : 자동차(-10.3, -8.6), 자동차부품(-9.2, -7.4), 무선통신·부품(-3.7, -20.7)

영국 공급망의 탈 EU화는 영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 `23.3.31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 타결 발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영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영국의 탈 EU 화가 우리 수출업계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영 간 공급망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연내 개시 추진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여 영국의 탈 EU 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시장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대(對)영 주요 수출품이자 영국에서 탈 EU 화가 뚜렷하게 진행 중인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화학제품, 전력기자재 등에서 공급망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했다. 특히, 2030 년 이후 영국 내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 잠재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이를 위해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고, 한영 FTA 의 원산지 규범에 의해 구축된 공급망을 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의 대(對)영 수출 동향(대수 기준)

전기차 : (`18) 1,461 ⇒ (`19) 2,888 ⇒ (`20) 20,639 ⇒ (`21) 27,085 ⇒ (`22) 31,262
하이브리드 : (`18) 13,309 ⇒ (`19) 18,251 ⇒ (`20) 20,461 ⇒ (`21) 19,463 ⇒ (`22) 32,558

간담회를 주재한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이를 위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FTA 를 통해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상에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영 수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FTA 공급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8.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유통업체 등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했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예.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들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 종)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해야 했으며,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 품목*(이하 '간소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이 공인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 등이 이를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먼저 농어민이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 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 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또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 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소관 고시를 개정하여 5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사례

[사례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하나로 국산 농산물 원산지 입증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급증하자 농산물 도매업체 A 사는 국내 농가로부터 딸기를 수매하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베트남에 수출하고자 했다(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하 딸기 세율 0%). 이를 위해 세관에 딸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소명서와 국내 재배·수확·거래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사는 딸기 생산 농가에서 해당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원산지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수출 시, 딸기의 기본 세율 15% 적용). 이번 관세청의 제도개선으로, A 사는 국내 농가로부터 제공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만으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약 2 억원 상당의 한국산 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관세 약 3 천만원(기본세율 15%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세율 0%)을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원산지증명 간소화 사례

[사례 2] 생산자의 '원산지인증수출 인증서'로 하나로 국산 물품 원산지 입증

도매업체 B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C사가 제조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태국의 신규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조건에는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이 있었다. 이에 B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C사에게 세관 제출을 위한 원산지소명서와 재료명세서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C사는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이번 관세청의 제도개선으로, B사는 C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약 6천만원 상당의 콘택트 렌즈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태국 내 관세 약 3백만원(콘택트렌즈 기본세율 5%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 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태국 포함)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해짐에 따라 세계 각지의 판매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전문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